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추가지정과 남북경제협력

—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지정을 중심으로 —

배 중 열*

- I. 문제의 제기
- II.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등장배경
- III. 지방급 경제개발구 창설에 대한 평가와 그 시사점
- IV. 맺음말

요약

특수경제지대라는 위상으로 북한에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등장하게 된 것은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로선’이 채택되었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김정일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탄생의 근거법인 경제개발구법제는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등 북방특구법제와 비교해 ①경제특구의 개발·관리에서의 독자성, ②투자자산의 법적 보호, ③특혜적인 경영 활동 조건, ④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수준 등에서 그 법제의 경쟁력은 약간 떨어지나 각 도(직할시)에 특수경제지대라는 법제 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있어서 진전된 조치였다.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북중 국경지역, 중국 자본의 진출이 편리한 황해지역, 중국의 출해구 확보와 관련된 동해 지역 등을 우선 지정해 北中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을 무시한 경제특구의 과다지정, 북한의 기존 외국인 투자패턴과 상이한 경제개발구 지정 등으로 그 성공 가능성이 유동적이라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각 특구마다 세심한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방급 특수경제지대의 확대는 개성에서 북방 지역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바, 그 접근 방향은 ①남측도 경제개발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북남경제협력법제에 특수경제지대와 관련된 규정을 삽입해 법제의 흠결을 보완하고, ②개성공단의 내·외연 확대는 개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예를 들어 평양·남포지역도 가능하다는 시각에서 5.24조치의 선별적 완화와 북한 경제개발정책의 발전적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I 문제의 제기

2013년 11월 2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4개 특수경제지대(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수경제지대)의 추가설치가 당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공포되었음을 밝혔다.¹⁾ 이는 2013년 10월 16일과 17일, 특수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 성과와 경험, 의견들을 교환하기 위해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개최된 국제 토론회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강정남 박사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이미 예고되었다.²⁾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같은 4개의 특수경제지대들이 이미 전에 나왔고, 올해에는 곳곳에 14개의 경제개발구들이 생겨났다. 이에 맞게 특수경제지대들에 대한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조치들이 새롭게 취해지고 기존법규들을 수정·보충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흐름은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지정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개혁·개방사에서 특수경제지대의 개발과 운영은 중앙정부의 관할 영역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한정적이었다.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특수경제지대의 창설이 각 도(직할시)로 확대된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있어서 진일보된 조치인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고의 관심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집중되었다. 첫째는 개발구로 지칭된 지방급 특수경제지대의 등장배경과 그 특성이며, 둘째는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개발·운영방향과 관련된 평가를 바탕으로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과 그 대응과제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1) 조선신보, “신의주시에 특수경제지대, 도들에 13개 경제개발구, 2013. 11. 27.

2) 조선신보, “특수경제지대개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조선의 특수경제지대정책을 소개, 2013. 11. 18.

II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등장배경

1. 경제개발구의 위상과 특성

<표 1>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주요내용

명칭(위치)	유형(유치업종)	협력방식 (총투자액)	규모(특기사항)
압록강경제개발구(평북 신의주시 용운리)	경제개발구(현대농업·관광휴양· 무역)	합영 또는 단독 (2.4억 달러)	약 6.6km(전기, 가스 중국 경내 보장이 합리적)
만포경제개발구(자강 만포시 미타리·포상리)	경제개발구(현대농업·관광휴양· 무역)	합영 (1.2억 달러)	약 3km(전력은 장자강발전소)
위원공업개발구(자강 위원군 덕암리·고성리)	공업개발구(광물자원과 목재 가공· 기계설비제작·농토산물가공 등)	합영 또는 합작 (1.5억 달러)	약 3km(전력은 포연하발전소)
신평관광개발구(황북 신평군 평화리)	관광개발구(유람·휴양·체육· 오락 등)	합영 또는 단독 (1.4억 달러)	약 8.1km(100KVA 능력 자체 발전소 공사 진행)
송림수출가공구(황북 송림시 서송리)	수출가공구(수출가공·창고보관· 화물운송)	합영 또는 단독 (0.8억 달러)	약 2km(이동통신 가능, 전력은 1km지점에 22만KVA 변전소)
현동공업개발구(강원 원산시 현동리)	공업개발구(정보산업·경공업· 관광기념품)	합영 또는 단독 (1.0억 달러)	초기면적 약 2km(전력은 안변 청년발전소 등)
흥남공업개발구(함남 함흥시 해안구역)	공업개발구(보세가공·화학·건설· 기계설비)	합영 또는 단독 (1.0억 달러)	1차적으로 약 2km(전력은 장진 강발전소 등)
북청농업개발구(함남 북청군 문동리·부동리·종산리)	농업개발구(과수·과일종합가공· 축산)	합영 또는 단독 (1.0억 달러)	약 3km(전력은 허천강발전소 안곡 1차발전소)
청진경제개발구(함북 청진시 월포리·수성동·남석리)	경제개발구(금속가공·기계제작· 건설·전자부품·경공업·수출 가공·중계수송)	합영 또는 단독 (2.0억 달러)	약 5.4km(전력은 청진화력 발전소)
어랑농업개발구(함북 어랑군 용전리)	농업개발구(농축산·양어·연구 개발기지)	합영 또는 단독 (0.7억 달러)	약 4km(전력은 신규건설된 어랑천발전소)
온성섬관광개발구(함북 온성군 온성읍)	관광개발구(골프장·수영장·경마장· 민속음식점 등)	단독 또는 합영 (0.9억 달러)	약 1.7km(전력·난방·가스보장과 관련된 시설 신규건설 필요)
혜산경제개발구(량강 혜산시 신장리)	경제개발구(수출가공·현대농업· 관광휴양·무역 등)	합영 또는 단독 (1.0억 달러)	약 2km(전력은 삼수발전소)
와오도수출가공구(남포시 영남리)	수출가공구(수출지향 가공조립)	합영 또는 단독 (1.0억 달러)	약 1.5km(주변에 60만kW중유 발전소·만kW조력발전소 건설 계획)

출처: 북한경제개발구 투자제안서로부터 가공작성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경우 ①그 연계대상은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도인민 위원회 경제지대개발국으로, ②협력기간은 50년, ③북한 측의 출자는 토지리용권과 개발권, ④적극적인 장려대상, 특수경제지대에 준하는 특혜(기업 소득세 14%, 특혜 관세 등) 등의 정부우대조치를 부여한다는 공통적 기준하에 황해북도에 두 개(수출 가공구), 평안북도에 한 개(경제개발구), 자강도에 두 개(경제개발구, 공업개발구), 량강도에 한 개(경제개발구), 함경북도에 세 개(경제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 개발구), 함경남도에 두 개(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강원도에 한 개(공업개발구)를 지정하였다(<표 1> 참조).

그런데 지방급 경제개발구 탄생의 근거법에 해당하는 경제개발구법(2013. 5. 29)의 부칙 제2조(적용제한)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 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지방급 경제 개발구는 위의 4개 경제특구와 같은 특수경제지대이지만 그 법률적 위상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즉, 북한과 중국 정부가 합의한 기존의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등 북방특구법제와 비교해볼 때, <표 2>에서 보듯이 경제 개발구법제는 ①경제특구의 개발·관리에서의 독자성, ②투자자산의 법적 보호, ③ 특혜적인 경영활동 조건, ④시장메커니즘의 도입수준 등에서 그 법제의 경쟁력은 북방특구법제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준(<표 2> 참조)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①경제개발구는 “경제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특수경제지대”가 아니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서, ②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 보장에서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등의 분야는 규정되었으나 시장진출은 빠졌으며, ③“우리나라 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서 “해외동포”로 투자가규정이 협소화되었고, ④몰수와 국유화 조항은 “사전통지, 해당한 법적절차, 차별 없이,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하고, 효과 있게 보상”에서 “사전통지,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으로 약화되었으며, ⑤신변안전보장조항도 “신변안전 및 형사 사건과 관련 국가간 체결된 조약이 있을시 그에 따른다”에서 “신변안전과 관련 국가간 체결된 조약이 있을시 그에 따른다”로 규정하여 형사사건이 삭제되었다.

또한 ⑥건물부착물의 철거이설과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부담”으로 명문화했고, ⑦“기업의 종합개발경영, 특별허가경영방식 등 다양한 개발방식의 허용”에서 “해당개발구의 특성과 개발조건에 맞으며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표 2>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경제개발구법의 비교 2-①

구분항목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정령 제2007호: 2011.12.3)	경제개발구법 (정령 제3192호: 2013.5.29)
지대지위	경제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특수경제지대(2조)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2조)
경제활동 조건보장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시장진출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 경제활동조건보장(5조)	로력채용, 토지리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보장(5조)
투자가규정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우리 나라 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4조)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5조)
몰수와 국유화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 불가피시 사전통지, 해당한 법적 절차, 차별없이,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하고, 효과 있게 보상(7조)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 불가피시 사전통지,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7조)
신변안전 보장	공민의 신변안전과 인권은 법에 따라 보호,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 국가간 체결된 조약 있을시 그에 따름(9조)	개인의 신변안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보호, 신변안전과 관련 국가간 체결된 조약 있을시 그에 따름(8조)
적용법규	법·규정·세칙·준칙의 적용, 지대법규보다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양해문·합의서 같은 조약의 우선 적용, 지대밖의 법규보다 지대법규의 우선 적용(10조)	개발구 법·규정·세칙을 적용(9조)
개발원칙	경제무역지대와 그 주변의 자연지리적 조건·자원·생산요소의 비교우세보장, 토지자원의 절약과 합리적 리용, 경제무역지대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 보호 등(11조)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 투자유치를 다각화,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 보호, 토지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 등(19조)
개발방식	다양한 개발방식(기업의 종합개발경영, 특별허가경영 방식 등: 13조)	해당 개발구의 특성과 개발조건에 맞으며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23조)
건물부착물 철거이설	철거, 이설을 맡은 기관, 기업소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비용 부담 규정 없음: 20조)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 개발기업이 부담(27조)
개발구 관리원칙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관리위원회와 기업의 독자성 보장, 무역과 투자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경제발전의 객관적 법칙과 시장원리의 준수, 국제관례의 참고(23조)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기업의 독자성 보장,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국제관례의 참고(32조)
관리기관의 사업내용	준칙작성, 투자환경조성과 투자유치,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영업허가, 투자장려·제한·금지목록의 공포,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의 수립, 인원·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대한 협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등 총 15개 사업(27조)	준칙작성, 투자환경조성과 투자유치,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영업허가,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등 총 11개 사업(36조)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 개발방식을 제한했으며, ⑧특구관리원칙은 “관리위원회와 기업의 독자성보장, 무역과 투자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경제발전의 객관적 법칙과 시장원리의 준수”에서 “기업의 독자성 보장,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제공”으로 후퇴했고, ⑨관리기관의 사업내용에서도 “투자장려·제한·금지목록의 공포,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의 수립, 인원·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대한 협조, 위임 받은 재산의 관리” 등의 조항이 빠졌으며, ⑩외국노동력채용은 “통지”에서 “합의”로, ⑪월노임 최저기준 결정은 “인민위원회”³⁾에서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으로, ⑫통신보장은 “자유롭게 리용”에서 “리용에서 편의제공”으로 바뀌었다.

<표 2>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경제개발구법의 비교 2-②

구분항목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정령 제2007호: 2011.12.3)	경제개발구법 (정령 제3192호: 2013.5.29)
로력채용	북한 노동력 우선채용, 외국노동력 채용필요시 라선 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통지(49조)	북한 노동력 우선채용, 외국노동력 채용필요시 관리 기관과 합의(41조)
월로임 최저기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50조)	관리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협의 해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결정(42조)
상품·봉사 가격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 결정, 식량·기초식품 같은 중요대중필수품의 가격과 봉사료 금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결정하며 기업에 손해 발생시 재정적 보상(44조)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 결정(43조)
기업회계	기업의 회계계산과 결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의 적용가능(52조)	기업의 회계계산과 결산은 경제개발구에 적용하는 재정회계관련법규(44조)
류통화폐와 결제화폐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지대외화관리기관이 결정(59조)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46조)
지적소유권 보호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등록, 리용, 보호에 관한 사업체계를 구축(72조)	지적소유권의 등록, 리용, 보호에 관한 질서는 해당 법규(48조)
인원출입과 물자반출입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신속 하고 편리하게 보장(77조)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보장 (50조)
통신보장	우편·전화·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 (75조)	우편·전화·팩스 같은 통신수단 리용에서 편의 제공(58조)
적용제한	규정없음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개성 공업자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이 법의 적용 배제

3)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라선시인민위원회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은 평안북도인민위원회가 월로임 최저 기준을 결정한다.

2. 경제개발구의 등장배경과 그 의미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창설이 공식화된 것은 ‘핵 무력·경제건설 병진로선’이 채택되었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결정이었다. 당시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 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라는 김정일의 발언이 도화선이었다.⁴⁾ 이에 따라 북한의 각 도(道)들은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등장했고, 북한 당국은 경제개발구의 건설과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를 시작했다.

법 제도구축의 첫 번째 가시적 조치는 경제개발구의 설립·운동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초인 경제개발구법의 채택(2013. 5. 29)이었다. 경제개발구법 제3조에서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경제개발구의 명칭과 소속을 정하는 사업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창설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두 번째는 경제개발을 담당할 주체인 국가경제개발총국의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의 승격(2013. 10. 16)⁵⁾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경제지대개발국의 설치였다. 이로써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련된 북한 측 투자 연계선은, 예를 들어 해산경제개발구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량강도인민위원회 경제지대개발국이, 와우도수출가공구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남포시인민위원회 경제지대개발국이 맡게 되었다.

세 번째는 14개 특수경제지대(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수경제지대)의 추가 설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공포(2013. 11. 21)되어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것이었다. 즉, 경제개발구법에 명시된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 및 승인, 그리고 공포질서’는 ①지방급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중앙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신청하고, ②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로부터 그 창설이 승인되면, ③최고인민회의 상임

4) 강정남, “경제개발구법제도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기초적인 문제,”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3호(루게 제43호), p. 52.

5) 2013년 10월 16일 북한은 정령 제3404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개발총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함에 대하여)를 발표했다(로동신문, 2013. 10. 17).

위원회가 정령으로 공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13개의 경제개발구의 해당 도(직할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시행세칙과 준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기관은 경제개발구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경제개발구 법 제도에서 법과 시행규정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내각이, 시행세칙은 해당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준칙은 해당 경제기관의 관리기관이 제정 공포하며, 경제개발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적용되는 법규들은 경제개발구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이었다.⁶⁾ 그리고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경제개발구법 제34조)은 ①관리기관의 조직, ②경제개발구법규의 시행세칙 같은 경제개발구사업과 관련한 국가관리문건의 작성 및 시달, ③관리기관의 사업방조, ④경제개발구의 관리와 기업에 필요한 로력보장, ⑤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으로, 관리기관의 사업내용(경제개발구법 제36조)은 ①경제개발구의 개발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②투자환경의 조성 및 투자유치, ③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④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⑤대상건설설계문건의 보관, ⑥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⑦기업의 경영활동 협조, ⑧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⑨환경보호와 소방대책, ⑩관리기관의 규약 작성, ⑪이밖에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III 지방급 경제개발구 창설에 대한 평가와 그

1. 지방급 경제개발구 창설에 대한 평가

가. 북·중 경제협력에 초점

북한은 ①자강도 만포시, 자강도 위원군, 량강도 혜산시 등 북·중 국경지역 3곳,

6) 강정남, 앞의 논문, p. 52.

②평안북도 신의주시, 황해북도 신평군, 황해북도 송림시, 남포직할시 와우도 등 중국자본의 진출이 편리한 황해지역 4곳, ③함경북도 청진시, 함경북도 온성도, 함경북도 어랑군, 함경남도 북청군, 함경남도 함흥시, 강원도 원산시 등 중국의 출해구 확보와 관련된 동해지역 6곳 등 황해남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는데, 이는 ‘핵 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으로 외자유치가 어려운 북한의 현실상 북·중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주지하다시피 14개의 특수경제지대의 추가지정이 있기 전 다양한 특구 후보들이 언론에 회자되었다. 예를 들어 ①신의주, 남포, 강령, 평성, 해주, 온성의 6개 산업특구, ②원산, 칠보산, 백두산의 3개 관광특구, ③개성의 고도과학기술개발구⁷⁾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⁸⁾ 그렇지만, 전술한 경제개발구법에 명시된 ‘경제개발구의 창설 신청 및 승인, 그리고 공포질서’에 따라 1차적으로 지정된 곳이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신암록강대교쪽의 신의주특수경제지대이며, 경제협력기간이 50년이지만 투자유치규모는 1억~2억 달러대에 불과하고 창설의 근거법인 경제개발구법에서 남측의 투자유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지정은 북한과 중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황금평·위화도와 라선경제특구와는 별도로 중국의 성 정부와 민간자본을 겨냥하여 ①일종의 독립채산제에 바탕을 두고, ②지방의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며, ③비계획경제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책으로 추정된다.

나. 유동적인 경제개발구 건설

특수경제지대의 개발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등 4대 경제특구에 이어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수경제지대를 추가 지정한 것은 경제특구의 난립에 해당되어 북한의 자체능력으로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7) 북한의 조선중앙통신(2013. 11. 13)은 “홍콩, 싱가포르, 호주, 중동, 아프리카 기업들의 경제협력체인 평화경제개발그룹(대표 장수남)이 11월 11일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건설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8) 유원영,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의 및 전망,”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의 및 전망」, 여의도연구원 정책세미나자료집, 2013. 11. 13, pp. 1~12와 안병민, “북한경제개발구 창설계획에서 나타난 교통물류인프라정책,” 위의 자료집, pp. 20~40 참조.

또한, 북한의 기존 지방 비특구지역은 중앙이나 특구지역과는 달리 경제특구 운영 경험, 경제특구담당 전문 인력 등이 거의 없고 인프라정비와 관련 중앙정부나 군부의 경제적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워 13개의 경제특구의 개발은 무리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달리 말해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①현실적 추진 세력이 북한과 중국의 지방정부이며, ②투자자 체류, 비자, 통신, 금융, 전력, SOC 등에서 경영활동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고, ③핵 무력 고수정책으로 인하여 국제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중국 이외의 국가는 관망세에 있는 국제 분위기 등으로 인해 중국 자본의 진출에도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투자유치규모가 1~2억 달러 정도로 크지 않는데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와 공공시설 건설을 개발기업이 해야 하는 것(경제개발구법 28조)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개발구 창설계획

외국인투자유치의 주체로 기존의 중앙급 경제특구에 이어 지방급 경제특구가 신규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 있어서 진일보된 조치이나 13개 지방경제특구에 대한 외자유치 계획이 중앙정부의 통일적 장악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각 특구마다 지역적, 업종적 특성을 반영하는 개발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①협력기간 50년, ②북한 측의 출자는 토지리용권과 개발권, ③협력방식은 합영 또는 단독투자, ④적극적인 장려대상, 특수경제지대에 따르는 정부 우대조치(기업소득세 14%, 특혜관세)의 제공 등으로서는 각 지역 경제특구의 강점이 잘 드러나지 않아 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의 구체화가 요망된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4개의 경제개발구, 3개의 공업개발구, 2개의 관광개발구, 2개의 농업개발구, 2개의 수출가공구를 지정했는데, 이는 기존의 북한 외국인투자 패턴과 상당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기존외국인투자는 ①보상무역 방식 등을 포함한 합작방식 위주로서, ②경공업과 채취공업 부분에 집중되었으며, ③채취공업 분야를 제외한 부문에서는 소규모투자가 주류였다.⁹⁾

9) 손흥도,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활동에 대한 일반적 분석,” 「경제연구」, 2013년 제3호(루계 제160호), pp. 49~50.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시행규정, 세칙, 준칙 등 법제의 대외적 공포수준이 높지 않아 외국투자자가 투자상황에 대한 현주소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원학보(2013년 제3호)에 “라선경제무역지대 공업구 개발 및 경영규정¹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나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특수경제지대안에서 임차한 토지를 저당(또는 재임대)의 방식으로 자기의 사용 목적에 맞게 보세지역, 상업지역, 상업용주택지역, 관광 및 봉사지역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리용할 수 있다”¹¹⁾고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대외경제부문 법규집(2012년)’ 등에 나타나 있지 않다.¹²⁾

2.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과제

가. 경제협력지대의 확대기회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사를 돌이켜보면, 김대중 정부에 의한 햇볕정책의 시행 이후 교류형태는 단순물자와 위탁가공교역에서 개성과 금강산 경제특구의 건설, 철도도로의 연결, 경공업 원자재 제공 등 그 교류형태가 다양화되었으나 교류협력지대는 특정 지역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5·24조치에서 시사하듯이 남북 관계에 군사 안보적 영향력이 증대된 측면이 크지만,¹³⁾ 개성과 같은 특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 제도의 미비도 중요했다. 그런데 13개 지방급

10) 북한의 정무원은 라선지역이 자유경제무역지대였던 시절에 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 개발 및 경영규정이라는 법규범을 공포한 적이 있다(배종렬, “김정일시대 북한 개방법제의 특성에 관한 일고찰: 외국 투자관계법체제를 중심으로,” 「통일과 법무」, 2011. 11. 겨울호, 법무부, p. 25 참조).

11) 리철민, “공화국특수경제지대에서의 토지저당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사회과학원학보」, 2013년 제3호 (루게 제80호), p. 65.

12) 북한의 2012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 대외경제부문」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시행규정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006년도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 외국투자부문」에 수록된 라선경제무역지대 시행규정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중계무역규정, 중계점임자대리업무규정, 청부건설규정, 통계규정,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 외국인출입 및 체류규정, 세관규정, 관광규정 등 총 9개 규정으로서 개성공업지구와는 달리 세칙과 준칙 관련 법규범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 순항하던 남북한 경제교류에 장애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후계체제구축을 위해 선군사상을 강화하면서부터였다. 총격에 의한 관광객사망사건(2008. 7)으로 금강산관광중단이 발생하고, 천안함포격사건(2010. 3)으로 對北경제교류를 제한하는 5.24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중국은 천안함사건이후 對北경제협력을 강화했다(배종렬,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제의 특성과 그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13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p. 22와 p. 28 참조).

경제개발구의 지정은 향후 개성에서 시작하여 북방지역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방정부가 특수경제지대를 설치하고, 세칙을 제정할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대북 경제교류의 법제도 환경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적 검토가 필요하다.

나. 법제흡결의 보완 필요성 증대

첫째는 <표 3>에서 보듯이 정령으로 공포된 4개의 경제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의 투자가조항을 비교해볼 때 경제개발구법은 남북협력법제가 아니라 대외경제법제로 분류될 것으로 추정되어 남측자본의 對北진출 시 법제의 정비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의 특수경제지대법에서 투자가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 그리고 우리나라 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인데 반해 경제개발구법에서는 ‘다른 나라의 법인·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폐지되기 전 남북협력법제였던 금강산관광지구법¹⁴⁾에서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으로, 대외경제법제로 분류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서는 ‘다른 나라 법인·개인·경제조직,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기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개발구법의 ‘해외동포’에는 남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자명하다.

14) 2011년 4월 9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73호(금강산관광지구를 내용에 대하여: 2002. 10. 23)의 효력을 없애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18호(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내용에 대하여: 2011. 4. 29)를 공포했다. 이로써 정령 제3373호에 근거한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그 하위 10개 규정은 2011년 4월 29일 자로 폐지되었다. 정령 제1618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강원도 금강산 지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내온다. 2.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지역이 포함된다. 3.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과 기타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며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5. 중앙관광지도기관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지들을 더 늘일 수 있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73호(주체 91(2002)년 10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용에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로동신문, 2011. 4. 30).

<표 3> 특수경제지대법과 경제개발구법의 투자가 조항비교

법 명	투자가 조항	비고
경제개발구법 (정령 제3192호: 2013.5.29)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제5조)	대외경제법제로 추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정령 제2007호: 2011.12.3)	경제무역지대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법령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이 법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수 있다(제4조)	대외경제법제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정령 제2006호: 2011.12.3)	상동	대외경제법제
금강산관광지구법 (정령 제3715호: 2003.4.24)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관광은 남측 및 해외동포들이 한다. 외국인도 금강산관광을 할 수 있다(제2조)	남북협력법제(정령 제1618호 <2011.4. 29>로 폐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정령 제1673호: 2011.5.31)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제4조)	대외경제법제
개성공업지구법 (정령 제3715호: 2003.4.24)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제3조)	남북협력법제

둘째는 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로 채택된 남북협력법제의 모법인 북남경제협력법에는 특수경제지대와 관련되는 규정과 조항이 부재해 대외경제법제의 모법인 외국인투자법에 비해 개혁·개방성과 국제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북남경제협력법은 북·중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수차례 개정된 외국인투자법(1차: 1999. 2. 26, 2차: 2004. 11. 30, 3차: 2007. 9. 26, 4차: 2008. 4. 29, 5차: 2008. 8. 19, 6차: 2011. 11. 29)과는 달리 제정된 이후 한 차례의 수정보충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특수경제지대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라는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용어정의에 이어 “국가는 특수경제지대안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에 물자구입 및 반출입, 제품판매, 로력채용, 세금납부, 토지리용 같은 여러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라는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보장을 규정

<표 4> 외국인투자법의 특수경제지대 관련조항

구분 항목	외국인투자법 (정령 제1991호: 2011.11.29)	북남경제협력법 (정령 제1182호: 2005.7.6)
2조 10항 (용어정의)	특수경제지대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규정없음
9조 (특혜적 경영활동 조건보장)	국가는 특수경제지대안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에 물자구입 및 반출입, 제품판매, 로력채용, 세금납부, 토지리용 같은 여러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규정없음

하고 있으나 북남경제협력법에는 특수경제지대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표 4> 참조).

셋째는 북한이 2012년 12월 19일 법의 효력순위, 효력관계를 규정한 ‘법제정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¹⁵⁾ 북남경제협력법에서 개성공업지구법으로 연결되는 법제의 구조에 부분적 흠결이 발생해 개성공업지구법의 모범에 해당하는 북남경제협력법의 개정 필요성을 증대시킨 점이였다. 그런데 북한의 법제정법은 법규범들 사이에 모순·저촉이 발생할 경우 그 효력순위와 효력관계는 다음 세 가지 원리로 체계화하였다.¹⁶⁾

먼저 웃 기관 법문건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상위 기관법 우선 원리였다. 법 문건 중에서 ①최고의 법적 효력은 최고입법기관이 제정하는 헌법이고, ②최고주권기관이 헌법에 기초하여 일정한 부문의 사회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기본적인 법 형식인 부문법의 효력은 규정,¹⁷⁾ 세칙¹⁸⁾보다 높으며, ③내각이 낸 규정은 내각 위원회, 성과 도(직할시)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가 낸 세칙보다 높다고 규제하여

15) 리경철, “법제정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시기 법제정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2호(루계 제42호), p. 39.

16) 허경일, “공화국법제정법에 규제된 법의 효력순위와 효력관계,”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3호(루계 제43호), pp. 35~36.

17) 규정은 부문법을 전국적 범위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하거나 부문법을 제정할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는 부문에서 법적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 형식으로 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이 낸다(허경일, 위의 논문, p. 35).

18) 세칙은 부문법이나 규정을 일정한 부문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형식으로 내각위원회, 성이나 도(직할시)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가 낸다(허경일, 위의 논문, p. 35).

법규범의 효력 순위를 전반적으로 헌법→부분법→규정→세칙으로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낸 규정은 내각이 낸 규정보다 높고, 도(직할시) 인민회의가 낸 세칙은 해당 인민위원회의가 낸 세칙보다 높은 것으로 규제했다.

다음은 먼저 나온 법규범보다는 나중에 나온 법규범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후법 우월의 원리인데, 이는 효력 등급이 같을 경우 후에 제정된 법이 전에 제정된 법보다 현행 당 정책과 현실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넓은 범위의 일반사항에 적용되는 법인 일반법보다는 비교적 좁은 범위의 특수사항에 적용되는 법인 특별법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특별법 우선 원리였다. 이는 사회주의로동법보다는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이, 회계법보다는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 경쟁력 있는 사전 청사진 구상필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그 개발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①사전에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문건을 제기하고, ②중앙특수경제지도기관은 그 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며, ③투자가측 정부의 사전승인 정형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경제개발구에 진출하는 기업은 사전에 경제성 있는 개발과 관련된 명확한 청사진과 진출 전략을 구상하고 그것을 북한의 법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북한의 경제개발구 투자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력·용수, 물류, 철거시설, 인력조달, 협력기업 등에 관한 초보적 정보의 포함이었다. 이는 긍정적 변화이나 투자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 일례로 위원공업개발구의 경우 “개발구주변의 공장, 기업소들을 리용하여 개발구에 들어온 기업들의 임가공을 널리 발전시킨다”는 설명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개발구에 대한 인력공급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다. 특히,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경우 경제개발구의 관리와 기업에 필요한 로력보장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이라는 점에서 해당 도(직할시)가 보유한 인력 및 기업에 대한 사전정보파악은 필수적이다.

라.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

13개 경제개발구의 등장과 관련된 개성공단의 발전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성과 인근 지역의 노동력 공급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점, 둘째, 개성공단은 남측기업의 단독투자 위주로 설계된 공단이었다는 점, 셋째, 개성공단과 공단 이외의 북한지역 간에 연계체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 넷째, 북한 기관·기업소·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 등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개성공단은 공단의 국제화 문제, 달리 말해 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 문제가 현안 이슈로 부상해 있다. 그 접근 전략은 다음 두 가지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개성공단의 내·외연 확대를 개성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북한경제의 국제화라는 각도에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 기관·기업소의 참여방안과 개성과 개성 이외의 지역 간의 연계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즉, 개성공단의 2단계 사업은 개성에 국한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인프라정비는 북측이 담당하고 북한 기관, 기업소가 참여하지만 법제는 개성공단 법제를 기반으로 개발구법제와 같은 특수 경제지대법제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식 등을 통해 평양·남포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한 북한의 경제개발정책의 발전적 검토와 5.24조치의 선별적 완화를 연계하는 방향에서 현재 개성에 국한된 남북경제협력 지대를 확장시켜나가는 것이다. 이 경우 쟁점은 ①북한 선박의 남측해상진출금지, ②남북교역중단, ③방북금지, ④對北신규투자금지, ⑤대북지원보류 등을 골자로 하는 5.24조치의 처리방식이다. 현재 5.24조치는 유지에서 해제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정책의 영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단계적 허용 조치가 바람직하며 5.24조치의 해제를 반드시 선언적 방식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⁹⁾

19) 배종렬, “신정부의 바람직한 대북경제협력추진방향,” 「수은북한경제」, 2012년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p. 63.


IV

맺음말

북한의 조선경제개발협회 운영석 국장은 장성택에 대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 군사재판(2013. 12. 12)이 열린 3일 만에 가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장성택의 처형이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노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징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장성택과 그 일당이 북한경제에 큰 해를 끼쳤지만, 공화국의 경제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며 “지방정부 관리들이 관할지역내의 경제 개발구 관련 계획을 작성해 몇 달 안에 승인을 위해 공식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²⁰⁾

그러나 장성택의 출당 사유에 ①당이 제시한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원칙의 위반, ②국가재정관리체계에 혼란 조성, ③귀중한 자원의 매국적 헐값매각 등의 경제 관련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며,²¹⁾ 또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판결 보도문에서 죄목이 보다 구체화되고 수도건설사업의 방해 등이 추가되었다²²⁾는 점에서 장성택의 출당과 처형은 북한정부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강국건설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중국식 경제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장성택의 처형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향이다. 북한과 중국 정부 간의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황금평·위화도와 라선의 북방특구건설의 북한 측 책임자가 장성택이었으며, 숙청의 목표가 장성택이 아니라 장성택과 그 일당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는 장성택사건에 대한 북한 경제관료들의 반응이다. 경제관료들은 상당기간 복지부동자세를 견지하면서 업무처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선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상부의 지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20) Eric Talmadge, "NKorean official: Purge won't hurt economic policy," 「Associated Press」, Dec 15, 2013.

21)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13. 12. 9.

22) 조선중앙통신, 2013. 12. 14.

<참고문헌>

- 강정남, “경제개발구법제도에 대한 이해에서 제기되는 기초적인 문제,”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3호(루계 제43호), p. 52~53.
- 리정철, “법제정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시기 법제정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2호(루계 제42호), pp. 38~39.
- 리철민, “공화국특수경제지대에서의 토지저당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사회과학원학보』, 2013년 제3호(루계 제80호), p. 65~66.
- 배종렬, “김정일시대 북한 개방법제의 특성에 관한 일고찰: 외국투자관계법체제를 중심으로,” 『통일과 법무』, 2011. 11. 겨울호, 법무부, pp. 18~52.
- _____, “신정부의 바람직한 대북경제협력추진방향,” 『수은북한경제』, 2012년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pp. 63~68.
- _____,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제의 특성과 그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13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pp. 1~30.
- 손홍도,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활동에 대한 일반적 분석,” 『경제연구』, 2013년 제3호(루계 제160호), pp. 49~50.
- 유원영,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의 및 전망,”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의 및 전망』, 여의도연구원 정책세미나자료집, 2013. 11. 13, pp. 1~12.
- 안병민, “북한경제개발구 창설계획에서 나타난 교통물류인프라정책,”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의 및 전망』, 여의도연구원 정책세미나자료집, 2013. 11. 13, pp. 20~40.
- 허경일, “공화국법제정법에 규제된 법의 효력순위와 효력관계,”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3호(루계 제43호), pp. 35~36.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2012.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외국투자부문)』. 평양, 2006.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대외경제부문)』, 평양, 2012.
- 로동신문, 2011. 4. 30.
- 로동신문, 2013. 10. 17.
- 조선중앙통신, 2013. 11. 13.
- 조선중앙통신, 2013. 12. 9.
- 조선중앙통신, 2013. 12. 14.
- 조선신보, “특수경제지대개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조선의 특수경제지대정책을 소개, 2013. 11. 18.
- 조선신보, “신의주시에 특수경제지대, 도들에 13개 경제개발구, 2013. 11. 27.
- Eric Talmadge, "NKorean official: Purge won't hurt economic policy," 『Associated Press』, Dec 15, 2013.